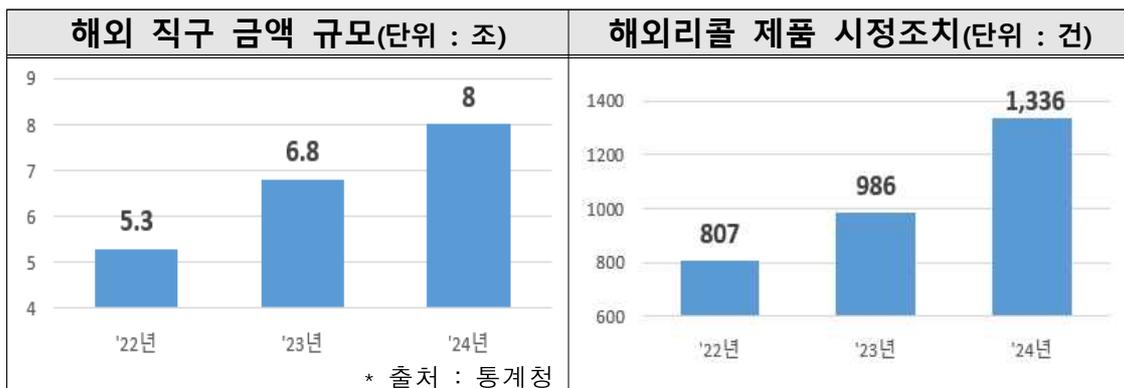


보도 일시	2025. 2. 25.(화) 06:00	배포일	2025. 2. 24.(월)
담당 부서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	담당자	김가영 팀장(043-880-5821) 김기백 차장(043-880-5822)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올해도 증가 - 국내 플랫폼 외 해외직구 플랫폼까지 모니터링 확대 실시 -

해외직구를 포함하여 온라인을 통한 해외 거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 또는 판매되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총 1,336건에 대해 유통(577건) 또는 재유통(759건)을 차단하였다.



이는 소비자원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에 접수된 해외 리콜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외 플랫폼을 통한 국내 유통 여부를 확인해 차단한 결과이다.

□ 국내 유통이 확인된 해외리콜 제품, 577건 유통차단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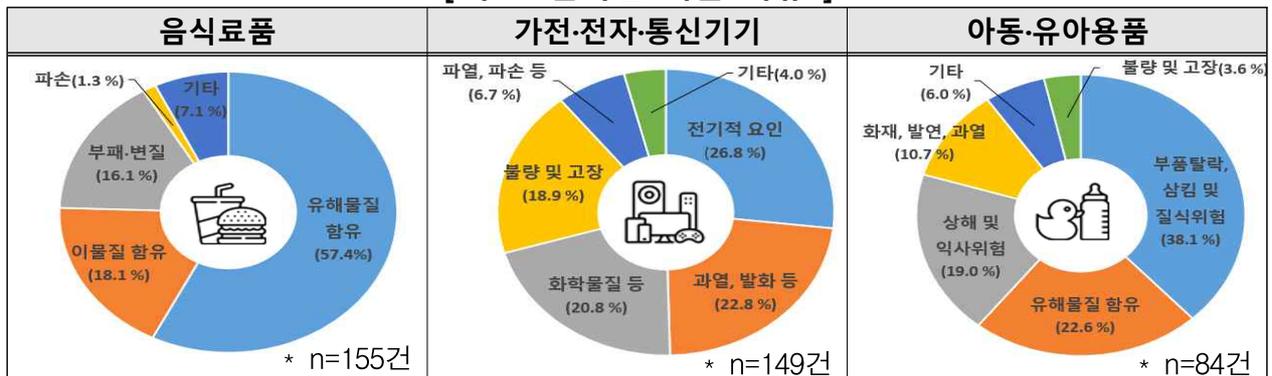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됐으나 국내 유통이 확인돼 유통 차단의 시정조치 한 실적은 577건이다. 품목별로는 '음식료품'이 155건(26.9%)으로 가장 많았고, '가전·전자·통신기기' 149건(25.8%), '아동·유아용품' 84건(14.6%)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 리콜 사유를 살펴보면 ‘음식료품(155건)’은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 함유가 89건(57.4%)으로 가장 많았고, 이물질 함유 28건(18.1%), 부패·변질이 25건(16.1%)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 함유로 인해 리콜된 음식료품 중에서는 해당 성분(대두, 땅콩, 우유, 밀 등)이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전·전자·통신기기(149건)’는 전기적 요인(감전위험, 기준 부적합 등)이 40건(26.8%)으로 가장 많았고, 과열·발화·발연이 34건(22.8%), 화학·유해물질 함유가 31건(20.8%)을 차지했다. 특히, 전기적 요인으로 리콜된 가전·전자·통신기기 중에서는 접지 및 절연 등이 미흡해 감전 위험이 있는 제품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유아용품(84건)’은 부품탈락, 삼킴 및 질식위험으로 인한 리콜이 32건(38.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이 19건(22.6%)이었다. 특히, 아동·유아용품 중에서는 소형 부품이 탈락될 우려가 있는 장난감 및 아기용품 등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품목별 리콜 사유]



또한 해외리콜 제품 577건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305건을 살펴본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191건(62.6%)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이 33건(10.8%)으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중국산(191건)의 경우 ‘가전·전자·통신기기’가 85건(44.5%), ‘아동·유아용품’이 46건(24.1%), ‘생활·자동차용품’이 28건(14.7%) 순이었고, 미국산(33건)은 ‘생활화학제품’이 10건(30.3%), ‘가전·전자·통신기기’ 6건(18.2%), ‘음식료품’ 5건(15.2%) 순이었다.

□ 안전상의 문제로 유통 차단된 제품이 다시 유통되어 재조치 한 경우가 759건

해외리콜 제품은 정식 수입사를 통한 유통보다는 오픈마켓의 구매대행이나 전문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하는 경우가 많고, 기존 판매처에서 판매를 차단한 제품이라도 다른 사업자나 유통 채널을 통해 다시 유통될 수 있다.

특히, '24년에는 알리·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면서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유통 또는 재유통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졌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플랫폼을 재유통 집중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민참여채널 등을 통해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해, 전년(513건) 대비 48.0%(246건) 늘어난 759건을 차단 조치하였다.

재유통 채널별로 보면 국내 오픈마켓이 418건, 해외직구 플랫폼이 341건이었다.

또한 이번 분석 결과, '가전·전자·통신기기' 품목의 재유통(299건, 39.4%)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품목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더욱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통해 리콜제품 유통차단 노력

정부부처 합동 '해외 위해물품 관리 실무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 기관들*은 안전성 검사, 리콜 정보 등을 토대로 해외 위해제품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소비자원도 이들과 협력하여 모니터링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장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주관),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소비자원(간사)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과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리콜된 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누리집	리콜 정보 게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위해정보알림 - 해외리콜 수집정보'
소비자24(www.consumer.go.kr)	'해외직구정보 - 해외리콜 정보'

< 붙임 >

1 해외리콜 제품 국내유통 모니터링 결과

□ '24년 해외리콜 제품 국내유통 관련 시정조치 현황

- '24년 한 해 동안 한국소비자원이 판매차단한 해외리콜 제품은 577건이었고, 판매차단된 해외리콜 제품에 대한 재유통 차단 실적은 759건으로 총 1,336건의 차단 실적이 있었음.
- '23년에는 시정조치한 해외리콜 제품은 총 473건이었고, 시정조치된 해외리콜 제품에 대한 재유통 차단 실적은 513건임.

< 연도별 해외리콜 제품 시정조치 현황 >

(단위 : 건)

구분		'23년	'24년
해외리콜 제품 시정조치	판매차단	466	577
	무상수리·교환	6	-
	표시사항 개선	1	-
		473	577 (22.0%↑)
재유통 차단		513	759 (48.0%↑)
계		986	1,336 (35.5%↑)

□ '24년 판매차단된 해외리콜 제품, '음식료품'이 26.9% 차지

- 품목별로 살펴보면 '음식료품'이 가장 많았고(155건, 26.9%), '가전·전자·통신기기'(149건, 25.8%), '아동·유아용품'(84건, 14.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3년에는 '음식료품'(113건, 23.9%), '가전·전자·통신기기' (106건, 22.4%), '아동·유아용품' (70건, 14.8%) 등의 순이었음.

< 품목별 해외리콜 제품 시정조치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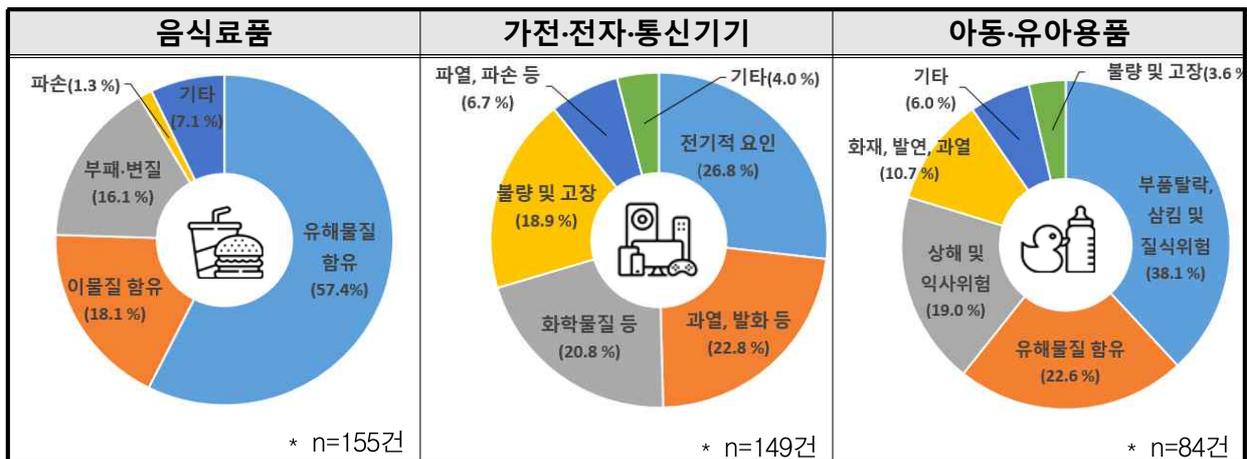
(단위 : 건, %)

'23년 해외리콜 제품		'24년 해외리콜 제품	
음식료품	113 (23.9)	음식료품	155 (26.9)
가전·전자·통신기기	106 (22.4)	가전·전자·통신기기	149 (25.8)
아동·유아용품	70 (14.8)	아동·유아용품	84 (14.6)
스포츠·레저용품	61 (12.9)	스포츠·레저용품	50 (8.7)
생활·자동차용품	46 (9.7)	생활·자동차용품	48 (8.3)
생활화학제품	21 (4.4)	생활화학제품	31 (5.4)
화장품	23 (4.9)	화장품	29 (5.0)
의류·패션용품	11 (2.3)	의류·패션용품	21 (3.6)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15 (3.2)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3 (0.5)
기타	7 (1.5)	기타	7 (1.2)
계	473 (100.0)	계	577 (100.0)

□ '음식료품'은 유해물질 함유, '가전·전자·통신기기'는 전기적인 위해요인, '아동·유아용품'은 삼킴 및 질식 위험이 많아

- 상위 3개 품목의 주요 리콜 사유를 살펴본 결과, '음식료품'(155건)은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 함유로 인한 리콜이 89건(57.4%)으로 가장 많았고, 이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이 28건(18.1%), 부패·변질로 인한 리콜이 25건(16.1%)임.
 -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 함유로 인해 리콜된 음식료품 중에서는 라벨에 미표기된 성분(대두, 땅콩, 우유, 밀 등)이 함유돼 알러지 반응 유발 위험으로 리콜된 식품(26건)이 가장 많았음.
- '가전·전자·통신기기'(149건)의 주요 리콜 사유로는 전기적 위해요인(접지미흡, 감전위험, 기준 부적합 등)이 40건(26.8%), 과열·발화·발연 위험이 34건(22.8%), 화학·유해물질 함유가 31건(20.8%)으로 나타남.
 - 전기적 위해요인으로 리콜된 가전·전자·통신기기 중에서는 접지 및 절연 등이 미흡해 감전 위험으로 리콜된 제품(15건)이 가장 많았음.
- '아동·유아용품'(84건)은 부품탈락, 삼킴 및 질식위험으로 인한 리콜이 32건(38.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이 19건(22.6%)임.
 - 특히, 아동·유아용품 중에서는 소형 부품이 탈락될 우려가 있어 리콜된 장난감 및 아기용품 등(24건)이 가장 많았음.

< 주요 품목별 리콜 사유 >



□ 제조국이 확인된 305건 제품 중 '중국산'이 191건(62.6%) 차지

- 해외리콜 제품 577건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305건* 가운데 중국산이 191건(62.6%)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이 33건(10.8%)으로 뒤를 이음.

* 해외리콜 수집기관 원문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제조국(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제품 수

○ 중국산 191건 중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은 '가전·전자·통신기기'가 85건(44.5%)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아동·유아용품'이 46건(24.1%), '생활·자동차용품'이 28건(14.7%)으로 뒤를 이음.

- 미국산 33건 중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은 '생활화학제품' 10건(30.3%)이었고,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건(18.2%), '음식료품' 5건(15.2%) 순이었음.

< 품목별 제조국 현황 >

(단위: 건, %)

품목	제조국			계
	중국	미국	기타*	
가전·전자·통신기기	85	6	6	97 (31.8)
아동·유아용품	46	1	12	59 (19.3)
생활·자동차용품	28	3	2	33 (10.8)
스포츠·레저용품	11	1	19	31 (10.2)
생활화학제품	5	10	9	24 (7.9)
화장품	0	4	18	22 (7.2)
음식료품	0	5	12	17 (5.6)
의류·패션용품	13	0	2	15 (4.9)
기타	3	3	0	6 (2.0)
의약외품	0	0	1	1 (0.3)
계	191 (62.6)	33 (10.8)	81 (26.6)	305 (100.0)

* 중국, 미국을 제외한 26개 국가(대만, 프랑스, 독일, 일본 등)

□ 시정조치된 해외리콜 제품 중 759건 재유통 차단조치

○ 국민참여채널(시니어소비자지킴이, 소비자안전모니터단)을 통한 오픈마켓 중심의 해외리콜 제품 재유통 모니터링과 더불어 알리·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 대상 모니터링을 추가 실시한 결과, '23년 대비 48.0% 증가한 759건 조치함.

<재유통 채널별 차단 실적>

(단위 : 건)

구분	'23년	'24년
국내 오픈마켓	513	418
해외직구 플랫폼	-	341
계	513	759 (48.0%↑)

○ 재유통 차단조치 내역(759건)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가전·전자·통신기기'(299건, 39.4%)가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114건, 15.0%), '아동·유아용품'(96건, 12.7%) 순으로 나타남.

< 품목별 해외리콜 제품 재유통 차단 현황 >

(단위 : 건, %)

품목	조치 건수
가전·전자·통신기기	299 (39.4)
음식료품	114 (15.0)
아동·유아용품	96 (12.7)
스포츠·레저용품	93 (12.3)
생활·자동차용품	70 (9.2)
생활화학제품	30 (4.0)
화장품	20 (2.6)
의류·패션용품	14 (1.8)
의약외품	7 (0.9)
기타	16 (2.1)
계	759 (100.0)

- ‘가전·전자·통신기기’ 중에서는 감전 위험으로 영국에서 리콜되었던 전기충전기(9건)가 가장 많았음.
- ‘음식료품’ 중에서는 라벨에 표기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으로 뉴질랜드에서 리콜되었던 초콜릿(5건)이 가장 많았음.
- ‘아동·유아용품’ 중에서는 질식 위험으로 호주에서 리콜되었던 유모차용 모빌과 유해성분 과다 함유로 유럽에서 리콜되었던 스피너 완구가 각 5건으로 가장 많았음.

2 정부·유관기관·사업자 협력을 통한 위해 제품 안전관리 강화

□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안전관리 노력 강화

- ‘해외 위해물품 관리 실무협의체’ 활성화로 종합적 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임.
 -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감시 강화를 위해 7개 부처·기관이 ‘해외 위해물품 관리 실무협의체’를 함께 구성하여 운영 중임(20.3.~).
 - 위해요인 조기 발굴·차단·제도개선까지 유기적 업무 추진을 통해 위해물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 해외 위해물품 관리 실무협의체 >

- (목적) 해외위해 제품의 국내 유입 차단 및 모니터링 사각지대 보완
- (참여부처·기관) 공정거래위원회(주관),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소비자원(간사)
- (주요 논의사항) 국내 유통되는 해외 위해물품에 대한 합동 감시·공동조치, 참여기관 간 정보 공유, 해외 위해물품 관리를 위한 국내 제도개선 검토 등

□ 사업자 주도의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

- 오픈마켓·중고거래플랫폼·해외온라인플랫폼과 체결 중인 ‘자율 제품안전 협약’ 활성화를 통해 해외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재유통 차단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 리콜정보 수집 및 공개

- 유럽, 미국, 중국, 호주 등 주요 49개 국가, 37개 식품·제품 안전 유관기관 사이트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해외리콜 정보를 수집하여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 있음.

< '24년 해외리콜정보 주요 수집 국가 및 기관 >

구분	국가	기관(사이트)명	구분	국가	기관(사이트)명
1	유럽 연합	EC(Safety Gate) 등	6	호주	ACCC, TGA 등
2	미국	CPSC, FDA, USDA 등	7	프랑스	Rappel Consommateur
3	캐나다	Health Canada 등	8	독일	BAuA, BVL
4	영국	CTSI, OPSS, FSA	9	중국	DPAC 등
5	일본	METI, CAA, NITE 등	10	뉴질랜드	FSAZN, MBIE 등

-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정보와 국내 유통이 확인되어 조치한 결과는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과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확인 가능함.

누리집	리콜 정보 게시	조치 결과 게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위해정보 알림 - 해외리콜 수집정보	위해정보 알림 - 위해정보 처리속보
소비자24	해외직구정보 - 해외리콜 정보	상품안전정보 - 위해정보 처리속보